

의안번호	2201610
의 퇴 인	추경호의원
회 답 일	2024. 9. 6.
추계번호	24D18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각각 1,451억 4,300만원(연평균 290억 2,800만원), 2,008억 3,600만원(연평균 401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시나리오 1 (장관·차관·차관보외 250명 증원, 308명 운용 가정)	29,009	28,246	28,765	29,293	29,830	145,143	29,028
시나리오 2 (장관·차관·차관보외 350명 증원, 408명 운용 가정)	40,144	39,079	39,799	40,532	41,282	200,836	40,167

-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정무장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정무장관)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27조(행정각부), 제29조 신설(인구전략기획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두는 행정각부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추가함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음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겸임 폐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정무장관) 신설	×	-소관사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될 정무장관의 업무 범위를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조직이나 인원 예측이 곤란함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5]를 참조
	안 제27조(행정각부) 및 제29조 신설(인구전략기획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7조 및 제29조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임차료의 경우도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원 규모, 위치가 확정된 후 그 규모에 따라 임차나 청사 신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를 수행 중인 타 부처의 인력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전입된다고 가정하며, 전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기존에 교육부에 두었던 차관보 1명을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차관보 1명의 인건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전입인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각 부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수행 중인 인력 9명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¹⁾에 관한 사무를 수행 중인 인력이 16명의 자료를 제출²⁾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조직도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 통계청 소속 인력 중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³⁾도 전입인원에 포함하여 전입인원을 총 55명으로 가정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고령사회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⁴⁾에 따르면, 신설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등을 이관받을 예정
 -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⁵⁾가 폐지될 예정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입인원에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전입인원, 유사 조직의 정원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계

- 시나리오 ①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1명 외에 25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이 있는 경우
(전입인원 55명을 포함하여 308명 운용 가정)
- 시나리오 ②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1명 외에 350명 규모의 인력 증원이 있는 경우
(전입인원 55명을 포함하여 408명 운용 가정)
-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인구정책 총괄 부처의 유사 사례로 제시한 경제기획원의 정원⁶⁾과 신설 조직임을 고려하여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 중 추가 증원은 고려하지 않음

1) 사회부총리 겸임을 위한 교육부 인력

2)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법률 및 직제 제·개정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재 기준에서는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참고 1] 각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능 및 정원 현황)

3) [참고2] 추가 가정에 따른 전입인원 현황

4) [참고3] 정부조직 개편방안(2024.7.1., 관계부처 합동)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3국 11과로 인력은 42명(별도정원 32명, 전문임기제 10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4.6.30. 기준)

6) 경제기획원은 1994년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1994년의 정원은 장관 1명, 차관 1명을 포함하여 총 554명임(「경제기획원 직제(대통령령 제14175호)」)

□ 시나리오별로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

- 부단위 조직 중 유사 사례인 중소벤처기업부⁷⁾를 참고하여, 장관 1명, 차관 1명의 정무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출
 -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
-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의 각 직급별 보수와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를 준용함
 -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직급별 평균 연봉과 직급별 정원 비율⁸⁾ 준용

[표 2] 정원 배정안

(단위: 명)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나리오1 (장·차관 외 250명 증원)	9	5	38	89	74	15	9	11
시나리오2 (장·차관 외 350명 증원)	12	7	53	125	104	21	13	15

주: 1.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한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존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겸임하게 되는 것
 이므로 부총리 겸임에 따른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보수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음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⁹⁾¹⁰⁾

7) 부단위 조직 중 신설 부처와 정원 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명, 차관 1명 외 487명)을 유사 사례로 참고 ([참고 4] 부단위 조직 정원 현황)

8) 중소벤처기업부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명, %)

직급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인원	17	10	74	174	144	29	18	21	487
비중	3.5	2.1	15.2	35.7	29.6	5.9	3.7	4.3	100

주: 3·4급인 경우 3급, 4·5급인 경우 4급으로 합산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은 6급, 기록연구사는 9급에 합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

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 7. 경제전망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7)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금	13.11%	13.21%	13.31%	13.40%	13.49%	13.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준용
 - 기관 신설 이후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¹¹⁾을 적용
- 인구전략기획부의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구 전략기획부의 적정 면적 및 소재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면적은 시나 리오별 증원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임차료는 전국 평균 임차료를 적용하여 산출
- 인구전략기획부 증원 인원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 기준 오피 스빌딩 전용률로 나누어 공급면적을 산출한 후, 공급면적(1㎡)당 임차료를 곱하여 계산
 - － 전용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과 기 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청사시설 기 준표를 토대로 추정
 -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을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서 보고한 전국 오피스 평균 전용면적비율(57.0%)로 나누어 공급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산출
 - － 월 임차료는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보고한 평균 임대료 월 17,500원/㎡(오피스 전체 기준) 가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 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 (장관 및 차관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1)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7)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	4,806	4,912	5,020	5,125	5,233	5,343

규정」 등에 따른 장관 및 차관의 보수는 다음과 같음

-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기존에 교육부에 두었던 차관보 1명을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차관보 1명의 인건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장관의 보수는 1억 6,237만원, 차관의 보수는 1억 5,47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장관 및 차관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장관	145,332	17,040	14,880	1,680	480	162,372
차관	141,143	13,560	11,400	1,680	480	154,703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원의 보수) 추계의 전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연봉액 및 직급별 구성을 준용하여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본부)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산출

[표 4] 직급별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	124,416	11,160	9,000	1,680	480	135,576
3급	100,104	8,160	6,000	1,680	480	108,264
4급	95,520	6,960	4,800	1,680	480	102,480
5급	72,492	5,160	3,000	1,680	480	77,652
6급	47,976	4,380	2,220	1,680	480	52,356
7급	38,160	4,320	2,160	1,680	480	42,480
8급	32,400	4,260	2,100	1,680	480	36,660
9급	30,936	4,260	2,100	1,680	480	35,196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고위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총액)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나리오별 증원인원과 1인당 보수를 곱하여 보수 총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1인당 보수는 직급별 1인당 보수에 공무원임금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5] 보수 총액: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 1	장관	1명	169	172	175	178	182
	차관	1명	161	164	167	170	173
	고위공무원	9명	1,267	1,291	1,316	1,341	1,366
	3급	5명	562	573	584	595	606
	4급	38명	4,044	4,120	4,199	4,278	4,360
	5급	89명	7,176	7,312	7,451	7,593	7,737
	6급	74명	4,023	4,099	4,177	4,257	4,338
	7급	15명	662	674	687	700	713
	8급	9명	343	349	356	363	369
	9급	11명	402	410	417	425	433
	합계	252명	18,809	19,164	19,529	19,900	20,277
시나리오 2	장관	1명	169	172	175	178	182
	차관	1명	161	164	167	170	173
	고위공무원	12명	1,689	1,721	1,754	1,787	1,821
	3급	7명	787	802	817	833	848
	4급	53명	5,640	5,747	5,856	5,967	6,081
	5급	125명	10,079	10,270	10,465	10,664	10,867
	6급	104명	5,654	5,761	5,871	5,982	6,096
	7급	21명	926	944	962	980	999
	8급	13명	495	504	514	524	534
	9급	15명	548	559	569	580	591
	합계	352명	26,148	26,644	27,150	27,665	28,19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6]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2,485	2,551	2,617	2,685	2,754	13,092
시나리오 2	3,454	3,546	3,638	3,732	3,828	18,19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인구전략기획부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1,107억 7,100만원, 1,539억 9,700만원으로 추계

[표 7]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인건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 1	보수	18,809	19,164	19,529	19,900	20,277	97,679
	기관부담금	2,485	2,551	2,617	2,685	2,754	13,092
	합계	21,294	21,715	22,146	22,585	23,031	110,771
시나리오 2	보수	26,148	26,644	27,150	27,665	28,192	135,799
	기관부담금	3,454	3,546	3,638	3,732	3,828	18,198
	합계	29,602	30,190	30,788	31,397	32,020	153,99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의 202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0.3%¹²⁾를 앞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225억 2,700만원, 313억 1,700만원으로 추계

12) 2024년 예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기본경비를 본부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표 8]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4,330	4,416	4,504	4,593	4,684	22,527
시나리오 2	6,020	6,139	6,261	6,385	6,512	31,31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 1인당 502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시나리오별로 각각 12억 7,000만원, 17억 7,2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자산취득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1,270	-	-	-	-	1,270
시나리오 2	1,772	-	-	-	-	1,77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임차료

- 추계기간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추계함
- 임차료는 인구전략기획부 정원(시나리오1 308명, 시나리오2 408명¹³⁾)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 기준 오피스빌딩 전용률로 나누어 공급면적을 산출한 후, 공급면적(1m²)당 임차료를 곱하여 계산하고, 관

13) 시나리오1의 경우 타부처 전입인원이 55명, 장관(부총리)·차관·차관보 등 증원인원이 253명이이고, 시나리오2의 경우 타부처 전입인원이 55명, 장관(부총리)·차관·차관보 등 증원인원이 353명임

리비는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을 50%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추정한 전용면적을 전국기준 오피스빌딩 전용률(57%)로 나누어 공급면적을 산출
 - (전용면적) 시나리오1은 3,826㎡¹⁴⁾, 시나리오 2는 4,976㎡¹⁵⁾
 -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전국 오피스 평균 전용면적비율(57.0%)로 나누어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산출하면, 시나리오 1은 6,712㎡, 시나리오 2는 8,729㎡
- 공급면적(1㎡)당 월 임차료(17,500원/㎡)를 곱하여 임차료 산출

□ 추계결과, 인구전략기획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105억 7,500만원, 137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임차료 및 관리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 1	임차료	1,410	1,410	1,410	1,410	1,410	7,050
	관리비	705	705	705	705	705	3,525
	합계	2,115	2,115	2,115	2,115	2,115	10,575
시나리오 2	임차료	1,833	1,833	1,833	1,833	1,833	9,165
	관리비	917	917	917	917	917	4,585
	합계	2,750	2,750	2,750	2,750	2,750	13,750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각각 1,451억 4,300만원, 2,008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14) 집무실 3,133㎡, 회의실 및 휴게실 254㎡, 저장시설(문서고, 창고) 439㎡로 구성

15) 집무실 4,081㎡, 회의실 및 휴게실 324㎡, 저장시설(문서고, 창고) 571㎡로 구성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나리오 1	인건비	21,294	21,715	22,146	22,585	23,031	110,771
	기본경비	4,330	4,416	4,504	4,593	4,684	22,527
	자산취득비	1,270	0	0	0	0	1,270
	임차료 및 관리비	2,115	2,115	2,115	2,115	2,115	10,575
	합계	29,009	28,246	28,765	29,293	29,830	145,143
시나리오 2	인건비	29,602	30,190	30,788	31,397	32,020	153,997
	기본경비	6,020	6,139	6,261	6,385	6,512	31,317
	자산취득비	1,772	0	0	0	0	1,772
	임차료 및 관리비	2,750	2,750	2,750	2,750	2,750	13,750
	합 계	40,144	39,079	39,799	40,532	41,282	200,83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전입인원, 증원인원 및 청사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수행하는 각 부처 주요 기능 및 정원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9

주: 1. 2024년 6월말 기준

2.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법률 및 직제 제·개정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재 기준에서는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2] 추가 가정에 따른 전입인원 현황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9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인구경제과	• 인구정책 총괄, 인구경제연구 및 통계	7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인구 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분석 • 사망원인통계 작성·분석	14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 전국·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분석 •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9
합 계			55

주: 정부조직 개편방안, 조직도 등을 바탕으로 가정한 전입인원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직제 제·개정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 3] 정부조직 개편방안(2024.7.1., 관계부처 합동)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 명칭: 인구전략기획부
 -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 개편방향

-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
 -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
 -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 기능 개편

-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
 - 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 기재부 :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 신설 기능 :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
 -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
-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 :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 이관
-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 강화
 -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
-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
 - 통계청 :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이관
 - 신설 기능 :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

□ 입법 관련 사항(개정 대상 법률안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정부조직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조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

[참고 4] 부단위 조직 본부 정원 현황

부처명	본부 정원(명)	부처명	본부 정원(명)
통일부	273	문화체육관광부	741
여성가족부	2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3
국가보훈부	334	법무부	795
중소벤처기업부	489	보건복지부	836
해양수산부	595	외교부	940
고용노동부	628	산업통상자원부	956
환경부	633	국토교통부	1,018
농림축산식품부	634	기획재정부	1,082
국방부	674	행정안전부	1648
교육부	692	-	-

자료: 각 부처 직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5] 정무장관 신설(안 제20조 신설) 관련 미첨부 사유

- 안 제20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무장관은 1948년부터 정부조직법에 무임소국무위원(1,2공화국)과 무임소장관(3,4공화국)으로 규정되어 운영되었으며, 1981년부터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1998년까지 운영되었음
 - 정무장관실은 제1정무장관(47명)과 제2정무장관실(51명)으로 조직·운영되었음¹⁶⁾
 - 제1정무장관은 국회·정당 등 정치관련사무를, 제2정무장관은 여성정책관련사무를 각각 수행하였음
 - 2008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임장관이 신설되어 2013년까지 운영되었음
- 소관사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무장관의 업무 특성상 그 업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조직이나 인원 예측이 어려움
 - 소관사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될 정무장관의 업무 범위를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려움
- 또한, 정무장관실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비나 청사임차료가 필요하나, 정무장관실의 조직이나 인원규모 예측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그에 따른 청사비용을 추계하기 곤란
- 다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던 특임장관실의 예산 현황을 참고할 경우, 연평균 88억원 이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특임장관실 구성 초기인 2009년에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을 제외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임장관실 예산은 연평균 88억 3,800만원임

16) 「정무장관실직제」(대통령령 제15462호)

제2조(정무장관의 호칭 및 사무) ① 정무장관의 호칭은 정무장관 다음에 (제1) 또는 (제2)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무중 국회·정당등 정치관련사무는 정무장관(제1)이, 여성정책관련 사무는 정무장관(제2)이 각각 수행한다

[표 1] 특임장관실 예산 편성 현황: 2010년~20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2010~2013)
인건비	422	2,227	2,679	2,542	2,866	2,579
기본경비	1,612	1,727	1,991	1,805	1,838	1,840
특임활동비	469	2,389	4,739	5,152	5,398	4,420
합계	2,503	6,343	9,409	9,499	10,102	8,838

주 1) 2009년은 결산기준 금액(예비비)

주 2) 단수조정으로 인한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0~2013회계연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따라서, 안 제20조 신설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동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